

데스크 시각



장필수
정치부장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 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논란일 것이다. 비선(秘線)은 정당한 조직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 구조를 말한다. 비선이 살아 움직일 때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외대에서 유출된 문건은 비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와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민씨를 지칭하고 있다. 두 비선 핵심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정외대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십상시(十常侍)'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정윤회씨와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한 것을 두고 국정을 농단한 중국 후한 말 10명의 환관에 빗댄 것이다.

십상시, 짜라시... 레임덕?

십상시가 정외대 문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정외대 문건 유출사건이 정치권을 떠나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형국이다. 사람 몇만 모이면 십상시의 좌장 격인 '정양'이 누구라는 등 비선실세와 십상시를 대비해 보는 웃자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짜라시 정국 소통부족 탓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령을 했지만 파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정외대 문건을 '짜라시'라고 표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만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짜라시라니.

짜라시는 '저러시'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뿌리는 것' '광고를 위해 배포하는 인쇄물'이란 뜻이다. 우리는 흔히 짜라시라고 발음하는데 신문에 끼워져 배달되는 전단지나 길거리에 뿌린 종이쪽지를 말한다. 좀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증권가 정보지를 짜라시라고 한다.

증권가 정보지로서의 짜라시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국회 보좌진이나 기업 정보팀, 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만들어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로 유통되다 보니 기존 소비자인 대기업이나 증권가,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지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이 8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짜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흔들리지 마라"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무서운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짜라시는 '루머 등을 모은 거짓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인들은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짜라시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아 "짜라시 형태로 대화록 일부라고 하는 문건이 들어와 참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열린 귀'가 타결책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지난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조사를 받자 출처를 짜라시라고 했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짜라시 발언에 대

해 국민들이 그들의 의도와 달리 은밀한 정보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데 있다. 그렇게 된대에는 정치나 국정에 대한 신뢰가 없는 탓이 크다. 정치인들의 말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짜라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확인되는 사례를 보아온 결과다.

올 여름 전국을 떠돌며 다녔던 유병언 사건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이라고 발표했을 때 곧바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지금도 미스터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경의 초동수사 실패지 정부 탓도 아닌데 억울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짜라시 정국을 타결할 방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시는 것이다. 끝없는 여당 지도부 대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초·재선 의원과 야당 지도부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청와대 말단 비서관에게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레이덕은 정권 말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의사 소통이 막히고 그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다행히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시계추를 돌릴 시간은 충분하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찾아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를 잡아먹는 개미핥기, 초원의 풀을 뜯어먹는 임팔라, 강물의 바닥에서 자라는 수초를 주식으로 하는 하마,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좋아하는 기린, 빠른 발로 동물을 쫓는 치타다,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 등이 평화롭게 또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 칼럼의 서두에 난데없이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언급하는 것은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마치 정글을 헤쳐 가는 것 같아 보여서다.

청년들에게 만약 당신이 아프리카 초

안정된 직업을 찾는 청년들에게

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동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동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심중필구는 사자를 선택할 것 같다. 아마도 그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같아 보여서 일 것이다.

오늘날 대학의 도서관에서 그리고 고시원에서 무언가의 자격증을 위해 준비하고 우리를 젊은이들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 직업이나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만이 성취도가 높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자는 다른 사자 무리와 경쟁하게 된다. 만약 사자 무리, 특히 우두머리 숫사자의 패배는 곧 죽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영역이 넓을수록 그리고 초식동물들이 많이 머무는 수 있는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표범이나 하이어나 등과 싸워서 제압을 해야 하고 심지어 그들이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주로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서 무리가 먹고 살게 되는데, 물소나 얼룩말과 같은 큰 덩치의 동물을 잡게 되면 무리 전체가 포식을 하고 2주 정도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지만, 이렇게 큰 동물들은 사냥하기도 쉽지 않고 사냥 도중 부상을 당

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사냥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사냥이 쉬운 작은 새끼들이나 허약하고 병든 동물들을 목표로 해서 사냥하고 대신에 이런 사냥감들은 무리 전체를 배불리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사자들은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굶으면서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공무원이 되어서 정년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의사나 약사,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이 수입이 많을 것 같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삶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호하는 직업들도 마치 사자의 그것과 같아서, 그 삶 자체에 병명이 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진입장벽은 높아서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좁은 국토에 한정된 인구 그리고 낮아진 출생률에 따라 점점 포화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인원을 통해 보든던 대로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어서 인구 1000명당 한명 꼴이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의사는 매년 3000명이 넘고 약사 또한 매년 17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친신만고 끝에 어떠한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격증을 획득하기까

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따진다.면, 과거처럼 소위 잘나가는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저마다의 생존능력을 통해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생존 방식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안에서 나만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해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은 자신이 진정 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저절로 찾게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창의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 보다 하고 싶은 직업을 찾는 것, 보여주기 위한 직업보다 자기만족이 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얼마 전 대한민국의 중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3% 내외의 최하위에 머물러 국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정부를 견제하고, 법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거둬들이는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 직장은 세금을 제공하면서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해 두고 있다.

무쟁점 법안부터 신속 처리해 국민신뢰 받아야

그런데 이런 기대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 무용론', '무노동 무임금' 주장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국민들이 발달해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요구할 지도 모를 일이나 국회의원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회개혁안을 보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내용을 많이 담아낸 흔적이 보인다. 이제 '실천'이 남아있을 뿐이다.

개혁안 내용을 보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 처리개선, 긴급현안 발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가 포함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법안들이 여야 간에 쟁점이 되지 않는데도 쟁점의 수단이 되어 상임위원회에 오랜 기간 묶여있었다. 이렇게 국회가 법안을 몽땅 안고 있으면서 통과시키는 숫자가 너무 적어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많은 서류 속에서 썩도록 놔두지 말고 우선 처리하여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상시운영하고, 요일별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일을 정하라고 개정을 요구한 것도 국회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말이 열리고 닫히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를 예로 들면 학기마다 시간표를 작성하고 이 합의된 시간표에 따라 그 학기의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 학교도 이렇진대 국회의 시간표가 고무줄처럼 운영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회운영과 의사일정을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상

임위원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 요일별 의사일정이 고정된다면 법안 심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작은 규모의 청문회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야 의정활동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행정부처와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도 효율화된다.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지금까지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회가 법률안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부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수치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잉규제를 막아야 한다.

올해는 세월호라는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기관이다. 국회가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회운영에 대한 기대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입무에 충실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지방자치발전계획 전략적 결정 안 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역 정가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등 6대 광역시 소속 기초의회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 폐지, 교육감 선출제 검토 등 지방자치제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청장과 구의원, 교육감 및 야당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계획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게 사실이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 부족과 비리 등도 간단없이 불거졌다. 대도시에는 생활권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다.

'복마전' 전남개발공사 미리 철저히 파헤쳐야

전남개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겨 40억 원을 날린 것이 대표적인 비리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로 부정의 주범부터 핵심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가 무언공 일로읍 일대 오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 내 인력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특정업체와 전면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40억 1155만 원을 낭비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예산 낭비,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 태만, 지도감독 소홀 등 21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 직원들을 징계하고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톱지구 택지개발은 택지 과잉공급이 우려돼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추진 과정도 대형 사업임에도 내부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업체 선정 불투명, 분할 발주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다. 전남도는 직원들이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와 개발공사 관계자 간 뇌물수수의 경우 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수사를 받게 된 관계자는 사업 당시 결제 라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감사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감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여론이 집중됐다. 감사의 결백을 내세우는 그의 주장이 옳아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볼 부분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대규모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애초부터 비리가 개어될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역사는 정말 되풀이되는 것인가? 막장드라마로 변해버린 요즘 국내 정치를 바라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지도층 인사들이 학연·지연·혈연을 내세워 패거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들이 꼭 조선의 봉당(朋黨)정치를 연상케 한다.

조선의 봉당정치는 선조 8년(1575년) 이조전랑(吏曹殿郞)에 대한 인사권 문제로 사대부들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갈라진데서 시작된다. 이후 선조 24년(1591년) 정여립의 옥사를 둘러싸고 동인이 또다시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나뉘면서 분파가 본격화된다.

한 계파로 남아있던 서인이 숙종 9년(1683년) 남인에 대한 정치 보복을 찬성하는 '노론(老論)'과 이에 반대하는 '소론(少論)'으로 갈라지면서 사색당파(四色黨派)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조선의 수많은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옥사(獄事)들이 거의 모두 이들의 당파 싸움에서 비롯된다.

물론, 오늘날엔 이들 사색당파가 조선이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나름의 이념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근대 사상의 정당정치

와 비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빚어낸 당쟁(黨爭)의 대부분이 복상(復讐)이나 세자책봉처럼 민생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들간의 치열한 대립은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한때 누그러지긴 했지만 19세기에는 극소수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세도정치(勢道政治)로까지 발전, 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통령 비선조직이라는 '만민화'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로 지목된 '십상시', 그리고 대통령의 동생 등이 연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직 장관이 대통령과 나는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폭로하는 작금의 국내 정치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상대를 몰아내려 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당파싸움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알고 있다면, 조선시대 백성들이 권세가들의 봉당정치·세도정치에 거센 민란으로 응답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